

등교 후 코로나19 검사 3~4배 폭증...방역당국 '혁혁'



등교수업이 재개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업무가 폭증하고 있다. 10일 광주시와 보건당국에 따르

학생·교직원만 하루 평균 300명...등교시간 전후 '업무부하'

“경미한 증상만 있어도 검사...혹시 모를 상황 대비 총력 대응”

루 평균 2%~5명꼴이다. 일반인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난다. 방역당국은 8일 594건, 9일 448건의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1월13일 중국에서 귀국한 사람들이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이래 광주시가 하루 평균 160여건을 처리한 것과 비교하면 3~4배 늘어난 수치다. 광주 첫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나왔던 지난 2월 하루 300건 안팎

의 검사를 했던 것과 비교해도 1.5~2배 가까이 늘었다. 학생·교직원 경우 일반인과 다르게 등교시간을 전후해 한꺼번에 보건소를 찾는 점도 업무부하를 가중시킨다. 광산구 보건소 관계자는 “고3 등교 이후 하루 학생·교직원 50~60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온다”며 “외국인 유학생들이 입국할 때 하루에 100건 이상 검사한 적도 있지만 등교하면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견된 학생·교직원이 오전에 집중적으로 보건소를 찾게 되기 때문에 더 힘이 든다”고 말했다. 검사 건수만 는 게 아니다. 교사, 부모 등 보호자 문의전화도 폭증해 광산구 보건소는 기존 4명을 뺀 응대인원을 6~9명으로 늘렸다. 광산구 경우 첨단종합병원과 수완k병원 등 선별의료기관에서 검체채취가 가능해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광주에서 학교 수가 가장 많고 검체를 채취할 다른 의료기관이 없는 북구보건소는 하루 100명 안팎의 교직원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찾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경미한 증상만 보여도 모든 학생·교직원이 검사받도록 하고 있다”며 “확진환자가 생기거나 인구가 많은 대도시 경우 학교에서 1차적으로 선별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혹시 모를 코로나19 발생에 대비해 총력을 다해 대처 중”이라며 “방역 담당자들의 업무가중에 마음 아프지만 조금만 더 힘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롯데월드 다녀온 원목고 학생, 아직 ‘거짓 양성’ 판단無”

“접촉자 중 양성 나오지 않는 등 특성 감안해 종합 판단”

서울 중랑구 소재 원목고등학교 학생 확진자(중랑구 21번)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를 통한 항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거짓 양성’ 논란이 일고 있다. 방역당국은 아직까지 거짓 양성을 판단할 만한 근거가 확실치 않아 종합적으로 감염 사실을 파악할 예정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병원에서 신속항체검사 결과

를 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도 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현재 확진자이다 아니냐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원목고 초발환자인 중랑구 21번 확진자의 코로나19 재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환경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검사에서 둘 다 음성 판정을 받았고, 코로나19 감염 시 생성되는 면역 항체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처음 유전자증폭(PCR) 방식의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는 양성 결과가 나온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현재 방역당국은 첫 검사 시 사용된 해당 학생의 검체로 다시 재확인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은경 본부장은 “아직까지는 위양성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으로 추가적인 조사와 판단을 할 예정”이라며 “이 학생의 접촉자 중에서 추가적으로 양성인 한 명도 나오지 않았던 그런 역학적 특성 등을 감안해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가구에 3~4명씩 분양...광주서 50억대 아파트 사기극

광주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서 50억원대 중복 분양 사기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 계약자들은 1명당 8000~9000만원의 분양대금을 내고 입주를 기다리다 최근 아파트중도

지역주택조합 측은 업무대행사가 분양대금을 받아 가로챘 것이라며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대행사 관계자들은 현재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고소장이 접수돼 어제부터 조합원 수십여명을 순차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아직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조합원들도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 조합원과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60여명 피해 추정...중대금 대출 서류 작성 과정서 확인
“피해 규모 늘어날수도” 경찰에 업무대행사 관계자 고소

면 광주 동구 무등산권 한 신축 아파트에서 아파트 중복 분양 사기가 발생해 피해 조합원들이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 관계자를 무더기 고소했다. 분양 피해를 입은 조합원은 60여명, 피해액도 50여억원에 달하는

금대출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피해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자신이 계약한 아파트에 본인 외에 2~3명의 분양권자가 추가로 있었고 아파트 내 여러 가구가 중복으로 분양된 사실이 확인됐다.



청암대 교수노조와 순천시민단체연대 등이 “교육부 권고를 무시하고 편법적으로 이사회 운영을 획책해 온 청암학원 이사장을 해임해야 한다”면서 “해직 교수 복직 등 대학 발전에 힘을 보태 새로운 이사들을 선임해 대학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 청암학원 새 이사진 선임하면 절대 안돼”

청암대학 교수노조 “강명운 전 총장 축, 보복인사 현실화...학교 정상화 시켜야”

“교육부는 대학 정상화를 위해 비교육적인 인사들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라.” 청암대학교 교수노조와 순천시 민단체연대 회원 50여명이 9일 청암대 건강복지관 2층 청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법인 청암학원 이사 합의적인 선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수들은 “강명운 전 총장의 부당한 학사 개입을 방지하고, 불법적 이사회 운영을 주도한 이사장과 이사들의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준법성과 교육철학이 내재된 이사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임원취임 승인에 신중해야 한다”며 “법국민 서명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수노조는 “국고 배임죄로 1년 6월을 복역하고 지난해 3월 출소한 강

전 총장이 불법적인 학사개입 중지를 요구하는 일부 이사들에게 사임을 종용하면서 2019년 5월 이후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노조는 “대학과 법인 운영의 정상화를 요구하며 이사장 측의 전횡을 견제해온 이사 3명의 임기가 10일 만료된다”며 “법인은 이 자리에 강 전 총장의 딸과 청암학원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사위를 교수로 채용하려고 갖가지 비리를 획책한 사람을 임명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들로 이사회가 채워지면 강 전 총장 측이 이사회의 절대 다수를 장악해 총장 해임과 간부들에 대한 보복인사를 도모할 것임은 명약관화한 현실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교육부는

교육부 권고를 무시하고 편법적으로 이사회 운영을 획책해 온 책임을 물어 현 청암학원 이사장을 해임하고, 조속히 새로운 이사를 선임해 청암대학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용태 청암대학 교수노조 지회장은 “이 순간에도 강 전 총장은 이사장과 측근 이사, 일부 보직 교직원을 통해 교직원들의 동태를 감시하고 학교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등 교육부 처분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또 다른 반칙들을 저지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소행 청암대학 교수협의회 의장은 “교육부는 학교법인 청암학원이 대학 발전에 일로 매진할 수 있는 이사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재구성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N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